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16. 3.

한 국 은 행

- 목 차 -

(한국은행 소관 : 17건)

1. 화폐단위에 대한 리디노미네이션 검토 필요	1
2. 한국은행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	2
3. 일본과의 통화스왑 및 통화거래소 개설 검토	3
4. 가계부채의 적정규모 및 한계가구 규모 산출	4
5. 금융증개지원대출 부정수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 검토	6
6. 행우회의 서원기업에 대한 출자지분 매각 검토 등	7
7. 근로시간 관련 취업규칙 개정 추진	8
8. 사택사용료 현실화 방안 마련	9
9.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보완 및 분석결과 보고	10
10. 스트레스테스트의 현실화 방안 마련	11
11. 외화자산운용수익률 성과평가 방안 마련	12
12.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 제도 공개시장조작 규정 삭제 검토	13
13. 과도한 계약지출 사례 엄정 관리	14
14. 실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계부채 통계자료 산출 검토	15
15.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방안 강구 및 유관정부기관에 대한 정책 건의 검토...	16
16. 경제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	17
17. 기준금리 조정분의 예금 대출금리 반영 모니터링	18

한국은행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1. 화폐단위에 대한 리디노미네이션 검토 필요</p> <p>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화폐단위에 대한 리디노미네이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으로 보이는바, 실행시 장단점 분석 등 다각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하여 검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리디노미네이션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사안이므로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충분한 사전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함</p> <p>○ 다만 지금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향후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분석 등 기존의 연구에 더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음</p> <p style="text-align: center;">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장 점</td> <td>- 계산·기장·지급상의 편의 확대 - 원화의 대외 위상 제고 등</td> </tr>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단 점</td> <td>- 새로운 화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 - 신규 화폐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 경제주체의 심리적 불안감 확산 - 단수효과·메뉴비용 등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 등</td> </tr> </table>	장 점	- 계산·기장·지급상의 편의 확대 - 원화의 대외 위상 제고 등	단 점	- 새로운 화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 - 신규 화폐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 경제주체의 심리적 불안감 확산 - 단수효과·메뉴비용 등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 등
장 점	- 계산·기장·지급상의 편의 확대 - 원화의 대외 위상 제고 등					
단 점	- 새로운 화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 - 신규 화폐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 경제주체의 심리적 불안감 확산 - 단수효과·메뉴비용 등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 등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2. 한국은행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p> <p>한국은행 경제전망치의 오차가 크고 최초 예측치보다 악화되는 패턴이 5년간 지속되고 있는 바, 한국은행 전망치의 오차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은행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다수 중앙은행의 경제전망에 상방 오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p> <p>이는 예상과 달리 세계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함</p> <p>○ 또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경제전망시 구조변화의 영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잠재적인 정책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에도 일부 기인</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p> <p>○ 유관부서 및 해외사무소 등을 활용한 글로벌 경제 모니터링 및 상시 전망시스템 활용을 한층 강화</p> <p>○ 최근 경제 구조변화,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반영 등 전망모형의 예측력 향상을 위해 전망시스템 개발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p> <p>○ 전망관련 행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선진 중앙은행과 전망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3. 일본과의 통화스왑 및 통화거래소 개설 검토</p> <p>한일 통화스왑 체결기 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일본과의 통화스왑 및 통화거래소 개설 문제를 검토할 것</p>	<p>(통화스왑)</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일본과의 통화스왑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한·일 양국이 지난해 2.23일 한·일 통화스왑 계약 만료시 ‘앞으로 필요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일본은행과의 금융협력·소통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음</p> <p>(통화거래소)</p> <p><input type="checkbox"/> 원/엔 직거래시장은 1996.10월 개설되었다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4개월만에 중단된 바 있으며, 2007년 재개설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개설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음</p> <p>○ 주된 이유는 ① 원/엔 직거래가 지속되기 위한 수요와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②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③ 원/위안화와 달리 원/엔 직거래 시장을 인위적으로 개설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임</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원/엔 직거래시장 재개설 여부는 국내 엔화표시 경상·금융거래 확대 및 원화 국제화 진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4.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 및 한계가구 규모 산출</p> <p>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가계부채 수준을 산출하고, 정책당국에서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계가구 규모를 산출하는 한편, 향후 금리인상시 변동금리대출 비율 등을 감안한 한계가구(부실위험가구)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안정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것</p>	<p>(적정규모의 가계부채 수준 산출*) * 2015.10.4. 기획재정위원장에게 既 설명</p> <p>□ 가계부채의 적정규모는 소비 제약 및 시스템 위기 관점에서 고려 가능</p> <p>① 소비를 제약하는 가계부채비율*에 대한 해외연구가 일부 있으나 동 비율을 넘어선 국가**의 경우에도 소비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계치를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음</p> <p>* WEF(세계경제포럼) 및 Cecchetti 각각 GDP대비 75% 및 85% ** 덴마크 139%, 네덜란드 123%(2014년말) 등</p> <p>②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가계부채 수준은 주택시장 상황, 금융시장 여건, 가계복지 수준,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적으로도 특정 임계치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음</p> <p>○ 이러한 이유로 시스템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특정 가계부채비율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p> <p>○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부문을 대상으로 가계부실이 확대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현재로서는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 위기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한계가구 규모 산출 및 금리인상에 따른 변화 모니터링)</p> <p><input type="checkbox"/> 2015년 3월 말 현재 한계가구*는 158만가구(금융부채 보유가구의 14.7%)로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전체 금융부채의 3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p> <p>*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5년) 결과를 통해 추정</p> <p><input type="checkbox"/> 금리 인상에 따른 한계가구의 변화는 미시자료 제약 등으로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나 금리 100bp 상승 시 한계가구가 약 13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p> <p>○ 이 경우 전체 한계가구는 171만가구(금융부채 보유가구의 15.9%)로 늘어나고 금융부채 비중도 37.5%로 상승</p> <p><input type="checkbox"/> 자세한 분석내용은 201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게재할 계획임</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5. 금융중개지원대출 부정수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검토</p> <p>고의, 중과실로 인한 부정수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기관 자격 박탈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대출취급 관련 규정에 의거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당수혜 정도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한도 감축, 일정기간 거래정지 또는 거래약정 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감축의 경우 위규 경중을 고려하여 제재강도를 차등화(2배±0.5배) <input type="checkbox"/> 그간 부당수혜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 사례가 없었던 것은 대부분 금융기관 직원들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고 금융기관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부당수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실수에 의한 부당수혜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감축으로 제재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앞으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부정수혜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거래정지, 거래약정 해지 등 엄중한 제재를 취할 계획임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6. 행우회의 서원기업에 대한 출자지분 매각 검토 등</p> <p>한국은행 직원이 만든 모임인 행우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서원기업에 수의계약 형태로 편의를 봐주고 있는바, 한국은행은 행우회의 서원기업에 대한 출자지분 매각 방안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보고할 것</p>	<p>□ 한국은행은 서원기업과 체결해왔던 수의계약을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재는 화폐박물관 안내용역만을 수의계약하고 있음</p> <p>○ 한국은행이 화폐박물관 안내용역에 대해 서원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화폐가 많은 박물관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가 필요하고, 전시물에 대한 이해 및 축적된 경험과 외국어 구사능력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요구되는 점 등 <p>□ 서원기업 매각과 관련해서는 우선 금년 상반기중 서원기업에 대한 회계법인 기업실사를 통해 기업가치 및 매각가능성 등을 파악해 볼 계획임</p> <p>○ 다만 서원기업 매각은 시장매각 가능성과 함께 서원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됨</p> <p>* 서원기업 직원 수는 19명으로 평균 연봉은 약 1,900만원임</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7. 근로시간 관련 취업규칙 개정 추진</p> <p>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도록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2016년 정기회 업무보고에 포함할 것</p>	<p>□ 한국은행은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음(2016. 2월 시행)</p> <p>○ 종업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8. 사택사용료 현실화 방안 마련</p> <p>사택사용자에 대한 사택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무지내 소유주택이 없고 가족과 동거 또는 부양하는 직원들에 대해 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이 사택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음(2016.1월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택사용료 부과방식 변경을 통해 사용료를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로 9년간 1/9~9/9씩 부과하던 방식에서 1~3년차는 1/3, 4~6년차는 2/3, 7~9년차는 3/3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 ○ 또한 이동대상직원의 지역본부 사택대여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소유사택사용료 부과기준을 인근지 임대실례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는 사택대여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며, 소유사택사용료 부과기준을 임차사택 보증금 한도내로 운용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9.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보완 및 분석결과 보고</p> <p>미연준 기준금리 인상 시 한·미간 기준금리 차이에 축소에 따른 외환유출가능성과 관련하여, 내년 임시국회 전까지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결과를 보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급격한 자본유출 충격에 대한 은행 부문의 자체 대응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음</p> <p>○ 스트레스 테스트 시 외화자금 유출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최대 유출률을 상정하여 실시함</p> <p><input type="checkbox"/> 미연준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금리차 축소에 대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p> <p>우리나라의 은행 부문은 내외금리차가 상당폭 축소되어 외화자금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10. 스트레스 테스트의 현실화 방안 마련</p> <p>한국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준금리가 1.75% 수준에서 실시한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준금리 변경 상황 등 현실성 있는 가정을 반영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재실시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매 스트레스 테스트 시점에서 기준금리 등 최근의 거시금융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음</p> <p>○ 국정감사(2015.9월) 당시 최근 발표된 스트레스 테스트는 테스트 시점에 가장 최근이었던 2015년 3월말 기준 거시금융 경제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그 결과를 201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2015.6월말 발간)에 수록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한국은행은 필요 시 기준금리 수준 등을 비롯한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새로 반영하여 여러 가지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임</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11. 외화자산운용수익률 성과평가 방안 마련</p> <p>한국은행은 외화자산(외환보유액, 외평기금, 금 등)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국회 자료제출 확대, 외부기관 위탁평가 실시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16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포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의 통화구성, 상품구성, 운용체계, 리스크관리 등 주요사항에 대해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여 왔음</p> <p><input type="checkbox"/> 운용성과에 대한 국회 자료제출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및 외국 중앙은행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12.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제도 공개시장운영 규정 삭제 검토</p> <p>한국은행은 금리자유화 이전 도입된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 제도가 중앙은행의 발권력 남용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공개시장운영 규정에서 이를 삭제할 것을 검토하고, 발권력 동원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2016년 업무보고에 포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최종시장조성자(market-maker of last resort)로서 필요시 금융안정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선별적 유동성 지원 또는 환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통안증권 상대매매 방식이 긴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음 ○ 미연준,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공개시장운영시 상대매매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음 <p><input type="checkbox"/> 다만 한국은행 통안증권 상대매매제도가 중앙은행의 발권력 남용에 동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책 목적상 긴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유의하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13. 과도한 계약지출 사례 엄정 관리</p> <p>약 1억원에 이르는 뮤지컬극장 관람, 조달청 조달품목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고급품 구매 사례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뮤지컬 단체 관람은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에 한국은행도 동참하여 문화공유를 통한 공동체 의식 고양을 위해 실시한 것임</p> <p>○ 그동안 부서별로 실시하던 문화행사를 전직원 행사로 바꿔 실시한 것으로 부서별 행사에 비해 경비절감</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물품 구매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부분의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단체행사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 시 취지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은행	<p>14. 실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계부채 통계자료 산출 검토</p> <p>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확도 높은 가계부채 통계산출을 위해 행정자료 및 금융자료 등의 실데이터를 활용해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거래 데이터에 기반한 가계부채DB 구축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 <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행정자료 및 신용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계청 등과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15.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방안 강구 및 유관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 건의 검토</p> <p>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개괄적인 수준에서의 관리 필요성만 언급하는 소극적 역할을 탈피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정부기관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제안 및 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p>	<p>□ 한국은행은 그 동안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제안 및 건의를 제시하여 왔음</p> <p>○ 특히 지난해 3월 이후에는 기재부 및 금융위 등 금융안정 유관기관간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등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제시하여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2015.7월) 및 ‘여신(주담대)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2015.12월) 등에 반영되도록 한 바 있음</p> <p>□ 향후에도 당행은 우리경제의 현안과제인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가겠음</p>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16. 경제·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p> <p>도청이전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지역 내 인구와 경제구조 등을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광역지자체별 1본부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2016년도 첫 국회 업무보고에 포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교통통신 발달, 업무전산화, 행정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역본부의 조직 및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말 이후 총 22개의 중소지방조직(지점 및 분실)을 폐쇄하였으며, 2012년에는 경제규모 변화, 경영합리화 필요성 및 조사연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 등을 감안하여 지방조직을 개편 ○ 이와는 별도로 지역본부에 「지역담당제」*를 도입(2011년)하여 한국은행 지방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예: 안동시, 내포신도시)에 대한 경제동향 분석 및 조사연구 등을 강화 <p>* 지역본부 관할지역내 특정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동 직원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모니터링, 회의참석, 건의사항 수렴 등을 전담하는 제도이며, 2016.3월 현재 14개 지역본부에서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p> <p><input type="checkbox"/> 시정·처리요구사항대로 국내 지사무소를 광역지자체별로 1본부를 설치하도록 「한국은행법」에 명시할 경우 한국은행 지방조직의 설치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현재의 지역본부 중 일부를 폐쇄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개편은 도청이전 등 행정여건의 변화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 발권업무 및 지역경제 조사연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 국 은 행	<p>17. 기준금리 조정분의 예금·대출금리 반영 모니터링</p> <p>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분이 시중은행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에 상쇄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준금리 조정분(인하·인상)이 시중은행의 예금·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수준과 속도에 대해 월별 모니터링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행은 금융상황 파악을 위해 매월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변경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기준금리 조정시에는 통화정책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시장금리 및 금융기관 여수신금리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지난 4차례(2014년 8월, 10월, 15년 3월, 6월)의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8월~2016년 1월 중 은행의 예금·대출금리(신규취금액 기준)는 각각 84bp, 90bp 하락하여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예금 및 대출시장에 원활히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의 경우 각각 97bp, 65bp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가계대출금리 하락폭이 작았음 —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중심으로 금리 하락폭이 일부 제약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예금·대출금리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p>